



임 관 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새 정부의 바람직한 가족정책 방향

새 정부가 출범한지 60여일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거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2개월여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 140개 과제가 마련되었다. 대부분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만들어진 국정과제에서 가족정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등 두가지이고, 다른 분야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가 향후 5년동안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와 협업, 현장중심 행정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연적이라는 공감대와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외형이나 형식보다 내용과 실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 수립된 국정과제의 집행에 매진하며 이를 평가하고 환류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여 여성행복이 가족행복으로 더 나아가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여성·가족 관련 국정철학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확대·내실화 해 나간다. 현재 253개에 불과한 인증기업·

기관 수를 2017년까지 1,300개까지 확대하고, 인증기업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특히, 각 부처가 정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일정한 가족친화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며, 중견·중소기업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 현실에 맞게 인증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강연(11회)과 기업 CEO에 대한 인식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12세 이하 대상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0세아 종일돌봄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확대된 4만 9천 가구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에게는 연 480시간에서 연 720시간(1일 3시간씩)까지 확대하여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장년 여성 8,000여명을 신규 총원하여 총 23,000명까지 일자리를 확대하며,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의 안심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모니터링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화 모니터링과 (불시)가정방문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0세아 돌봄을 2세까지로 추진하고, 시간제 돌봄의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의 유형도 다양화 해나간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월 5만원→7만원으로 2013년 인상), 가족복지 시설 입소 미혼모나 모자·부자 가족은 소득금액의 40%까지를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퇴소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조치하였다. 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아동연령이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고, 2013년 말까지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녀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며, 미혼모가 스스로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대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취·창업 훈련매장 운영 및 자립 저축계좌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해 나간다.**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전국 150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지역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현재 40만명 수준을 2017년까지 100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갈등 해소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을 현재 24만명 수준에서 2017년까지 8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상담 치료,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내 힘으로 하는 작은 훈인식’ 등 건전훈례문화 확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다문화가족의 양육 지원과 사회통합 환경을 강화한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3년 중 12개소를 신설하여 212개소로 확대하고, 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기 다문화가족에게 지역의 다양한 지원망을 연계하여 총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많은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되어 감에 따라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지원 및 학교적응·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

육, 홍보, 전문강사 양성 등을 시행해 나가며,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해서 현지 사전 교육 확대, 건전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 다양한 가족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개개의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도록, 가족 간의 이해와 양보, 서로 보살핌을 주는 따뜻한 배려와 공감의 함깨하는 가정,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